

# “김재원·김광동 ‘5·18 망언’은 민주주의 역사 부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공동성명**  
“정치혐오 조장...당장 사과해야”  
민주·정의·광주시 등도 사퇴 촉구  
“김기현 대표, 분명한 책임 물어야”

광주·전남 정치권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의 ‘5·18 망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일동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참담하다”며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하고 수차례 강조해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감정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승남·김원익·김회재·민형배·서동용·서삼석·소병철·송갑석·신정훈·양향자·윤영덕·윤재갑·이개호·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주철현 의원, 김경만(비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5·18진상규

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 공약을 ‘립서비스’로 평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5·18 정신을 부정하고 호남의 정신을 농락한 김 최고위원, 김 위원장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며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호남에서 한 발언은 결국 ‘립서비스’였나”고 반문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경악했다”며 “그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조상 묘도 팔겠다’고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피를 바쳤던 희생정신 그 자체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극우 언사에 동참한 자당 최고위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감과 정치혐오를 조장한 김 최고위원을 즉시 박탈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부로 하지 못할 망언을 여당 최고위원 신분에 있는 자가 쏟아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진윤’(진윤석열) 최고위원의 5·18 망언은 결국 국민의힘이 5·18 정신 계승에는 관심 없고 광주를 이용하는 데만 관심 있는 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도 성명서를 내고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1년 7월17일 방

송에 출연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게재되는 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당선 후에도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고 했다”며 “김기현 대표도 지난해 5월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여당 수석 최고위원 발언은 개인 의견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을 무시하고 망발에 가까운 언행을 일삼는 자는 즉각 지도부에서 물러나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있을 수 없는 폭언이다”며 “김 대표에게 묻는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가 (당의) 공식 입장이나”고 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에 대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이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냐는 질문에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윤, 국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김재원 “국민께 죄송...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안해”

**발언 이틀 만에 공식 사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5·18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이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발언 이후 당 안팎의 논란은 물론 대통령실과 여권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틀 만에 종전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월1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5·18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사실도 알

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과 헌법 수록 입장은 확고하다. 김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지 않느냐”며 “김 최고위원 발언은 당론도 아닐 뿐더러 본인의 생각일 뿐, 이를 대통령실과 연결 짓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현 당 대표도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 분위기나 성격 상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 짐작되지만 적절하진 않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www.kps.co.kr

###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  
환경  
Environment

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

**S**  
사회  
Social

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G**  
지배구조  
Governance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  
안전경영 강화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KPS